

제3차 지역정책 세미나

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을 위한
충남 인구정책의 새로운 정책대안

일시 2024년 9월 27일(금) 14:00

장소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

제3차 지역정책 세미나

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을 위한
충남 인구정책의 새로운 정책대안

일시 2024년 9월 27일(금) 14:00

장소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

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을 위한
충남 인구정책의 새로운 정책대안

1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(지역현안 공감대 형성) 충남 도정을 선도할 핵심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공론화 추진
- (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)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 정부의 인구정책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도의 체계적·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

2 개요

- 주제 : 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충남 인구정책의 새로운 정책대안
- 일시 : 2024년 9월 27일(금) 14:00~16:00
- 장소 :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
- 참석 : 충청남도, 충남연구원, 외부전문가 등

시간		세부내용	
14:00 ~ 14:05	5	개회식 및 참석자 소개	*사회: 이상준 기획조정팀장(충남연구원)
14:05 ~ 14:35	30	제1주제 "지방화 시대, 저출산 극복 스웨덴에게서 배운다"	홍희정 연구위원 (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)
14:35 ~ 15:05	30	제2주제 충남 인구정책 대안모색을 위한 북유럽 출산·양육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	이관률 선임연구위원(충남연구원)
15:05 ~ 15:55	50	종합토론	좌장 : 백운성 연구기획단장(충남연구원) 토론 김운영 교수(전북대학교) 김지현 연구위원(육아정책연구소) 나운규 부장(충청투데이) 김효환 주무관(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) 충남연구원 인구감소대응 TF팀원
15:55~16:00	5	마무리 및 폐회	

| 발제 1 |

“지방화 시대, 저출산 극복 스웨덴에게서 배운다”

홍 희 정 연구위원(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)

지방화 시대, 저출산 극복 스웨덴에게서 배운다

2024. 09. 27.

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홍 희 정 연구위원

발표 목차

- I. 서론
- 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- III. 충남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사점

I. 서론

➤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

- 2023년 통계청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, 한국의 출생아 수는 23만명 대로 합계출산율 0.72명을 기록

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표

- 지난 18년간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
- 장래 인구위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

➤ 충남 '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' 발표

- 영유아 365일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설치
- 아파트 공동시설, 종교시설, 휴폐원 어린이집 활용 돌봄센터 확대
- 거점 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초등학교 365일 24시간 돌봄제공
- 임신,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100% 확대
- 공공 최초 육아직원 주 4일 출근제 도입
- 자녀돌봄 시간 12세까지 확대
- 출산, 육아 지원 모범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
- 임신부 및 유아 동반 패스트트랙 운영 등
- 각종 수당 통합 및 대상·금액 기준 전국적 통일
-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도 도입 검토
- 결혼·출산 시 비과세액 5억원으로 확대
- 이민청 조속 설립 및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등 이민정책 전면 개편 등

I. 서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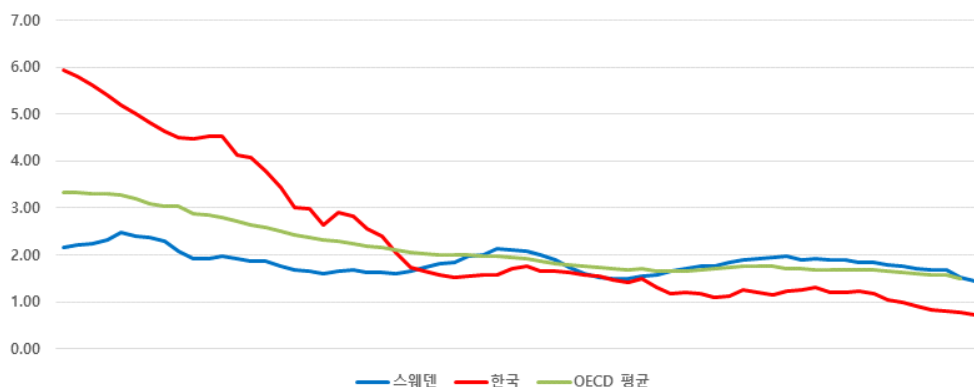
➤ 왜 스웨덴인가?

- 스웨덴은 1920년대부터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졌고, 일찍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국가 중 하나임
- 전 세계적 저출산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힘

➤ 스웨덴의 저출산 위기 극복의 성공 요인은?

-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포괄적 가족복지제도에 중점

합계출산율 (1960-2023)



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
1. 유연한 부모 육아휴직제도

-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제도 도입 → 수차례 개편을 통해 정착
 - 육아휴직기간 480일 (쌍둥이 660일, 세쌍둥이 840일)
 - 부모가 나눠 사용 가능,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총 3회까지 분할 사용 (384일은 자녀 나이 4세까지, 나머지 일수는 자녀 나이 12세까지 사용 가능)
 - 1995년 부모 의무 할당제 도입. 일명, 아빠 할당제 시행
 - 1995년 30일, 2002년 60일, 2016년 90일 점증적 확대
 - 총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은 부부라도 상호 양도 불가능 (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)
 -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 충원 필수
 - 2024년 7월 1일 조부모 유급 육아휴직제 도입
 - 양육자는 육아 휴직 수당 중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 가능 (단, 보험가입 시)
- ⇒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가족의 공동 의무로 패러다임 전환

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
2. 부모보험제도

- 부모 각각 사용하는 240일 중 195일의 경우 휴직 전 급여의 77.6% 보전, 나머지 45일 분은 하루 SEK 180* (한화 약 23,550원) 지급
 - * 2024년 9월 25일 1 SEK = 131.49
- 유급 육아휴직이 없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의 240일 동안은 하루 SEK 250(한화 약 32,872원)를 지급
- 통합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유급 육아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
 - 즉, 출산 전 240일간 하루 SEK 250 이상의 소득이 있었거나, 개별 세금을 납부한 자영업자에 한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유급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 시행
 - 첫째 출산 후 2년 반 이내 둘째를 출산할 경우 첫째를 기준으로 부모보험금 지급

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
3.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

- 1970년대부터 보육서비스를 본격 국가가 담당
-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보육수당 지급 및 공공 보육기관 이용 가능
- 보육수당은 스웨덴 개인번호*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
* 개인번호는 스웨덴에서 공식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음
- 보육수당은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며,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. 차상위계층의 경우 추가 수당 지급

(단위: SEK)

아이 수	수당	추가수당	최대수당
1	1,250	-	1,250
2	2,500	250	2,650
3	3,750	730	4,480
4	5,000	1,740	6,740

※ 출처: <https://www.forsakringskassan.se>

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
3.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

- 공공보육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주지가 등록된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고,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,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야 가능
- 지역에 상관없이 보육서비스의 질은 비슷하지만, 보육서비스 내용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으며,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용시간 등도 지역마다 다름
 - 보육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스톡홀름 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, 보육기간은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, 30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,
 - 1)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,
 - 2) 부모가 모두 전업 학생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하고 한 명은 전업 학생인 경우,
 - 3) 부모가 모두 실업 상태이나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, 부모 한명은 일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100% 이용 가능
 -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경우,
 - 1) 부모 중 한 명은 일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자발적 실업 상태인 경우,
 - 2) 부모 중 한 명은 일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

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
3. 보육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대

- 공공보육기관 이용 시간
 - 일반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.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경우 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
 -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특수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, 필요에 따라 보육도우미를 신청할 수도 있음. 보육도우미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고, 사전 협의가 되면 주말 이용도 가능
- 맞벌이 가정을 위한 등·하원 도우미 신청 가능

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
4. 탄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유연근로제도

- 유연근로제도
 -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로 시간이나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스웨덴에서는 대체로 오후 4시에 퇴근을 하여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으며,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매니저(사수)와 협의만 되면 가능
- 재택근무제도
 - 스웨덴 직장인은 주 1회 정도 본인이 원한다면 재택근무 가능
 - 일부 회사에서는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공간 사용료를 절약하고,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장. 예를 들면 회계사, 정보기술 개발자 등
- 시간선택제
 - 시간제 일자리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고용 불안의 형태가 아니라 기혼 여성들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해 발전 시킴

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
4. 탄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유연근로제도

- 시간선택제
 -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, 경제적 보상이나 임금, 연금, 휴가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, 일반직과 동일하게 승진 가능
 - 정규직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100% 근로로 원복 가능
 - 스웨덴 SE(Skandinaviska Enskilda Banken)은 직원의 약 14%가 시간선택제. 정규직의 시간제 근무 형태는 주 1회 휴무일 지정 또는 매일 2시간 단축 근무 등으로 운영되며, 임금, 휴가, 연금 등은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
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
5.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실질적 지원

- 동거혼(삼보)과 결혼의 제도적 차이 최소화
 - 유산 상속 외에 동거혼은 모든 부분에서 결혼과 동일한 대우
- 임신을 위한 난임 치료 및 시술
 - 2016년부터 파트너가 있는 여성(결혼 혹은 동거) 뿐 아니라 미혼이라도 임신을 원한다면 관련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 - 최대 시술비 전액 지원
 - ⇒ 자녀를 출산·양육 할 능력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엄마가 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
- 출산 시 출산 패키지(영유아 기본용품)를 신청하여 수령 가능
- 출산 휴가 (배우자 출산휴가)
 - 출산휴가는 10일이며, 쌍둥이 20일, 세 쌍둥이 30일
 - 10세 이하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출산한 것과 동일한 권리가 주어짐

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
6. 무상공교육 및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 시행

- 모든 교육과정 비용 무료
 - 북유럽 및 EU 국가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
 - 의무교육의 경우 모든 외국인에게도 해당
- 초.중.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지원
 - 프로그램이 다양하며, 수업의 질이 높고, 비용은 무료거나 최소한의 비용(재료값)만 발생

⇒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줌

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
7. 주거지원

-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
- 무주택자 또는 부양가족에 따라 주택보조금 제공 (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)
 -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저리대출
 - 보증금 및 월세 보조를 위한 지원금 제공

II. 스웨덴의 포괄적 가족복지제도

8.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 정책과 결합한 저출산 정책 시행

- 최근 5년간 스웨덴 인구 증가의 50% 이상은 이민자가 차지
- 스웨덴 내 외국배경을 가진 사람은 약 10%
- 이민자의 정주를 돕기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 개발
- 기술자를 위한 정주를 위한 패스트트랙 적용 등
- 외국배경 출신을 위한 출산과 육아 프로그램 지원
- 외국배경 출신을 위한 통역 서비스 지원 (병원, 보육시설 등)
- 외국배경 출신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
- 정주 등 생활 전반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, 태교 등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지원
- 스웨덴 개인번호가 없을지라도 동일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

III. 충남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사점

1.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 제고
2. 실효성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육 기관의 확대
3. 근무환경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 필요
4.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
5. 무상공교육 확대 및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지원
6. 저소득 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금 제공
7. 이민정책과 결합한 저출산 정책 제고
8. 사회적 인식의 유연한 전환과 교육의 필요

참고문헌

- 김연진 (2020),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, 국제사회보장리뷰, 14, 124-129
- 김영주, 안선영, 김현아, 박효진 (2014), 일하는 방식.문화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연구, 서울: 일생활균형재단
- 송지원 (2018), 스웨덴, 노르웨이, 덴마크의 육아휴직제도 및 사용 실태, 국제노동브리프, 18(1), 65-72
- 정희정 (2019), 일.생활 균형 및 성평등 현안과 유연근로제의 한계, 국제사회보장리뷰, 8, 49-60
- 홍희정 (2019), 스웨덴의 일.생활 균형 정책과 시사점, 국제사회보장리뷰, 9, 109-121
- 홍희정 (2020), 엄마의 선택에 대한 스웨덴의 대답, 복지이슈투데이 12월호, 서울복지재단
- 홍희정.홍성현 (2019), 스웨덴에서 한국의 미래를 꿈꾸다, 파주: 이담박스
- Anell and Hasss (2009), "Work-life in Sweden", Boston College Centre for Work & Family, Executive Briefing Series, July
- Chung, H., & Van der Horst, M., (2018), "Women's employment patterns after childbirth and the perceived access to and use of flextime and the teleworking, Human Relations, 71(1), 47-72
- Chung, H., (2018), Gender, flexibility stigma, and the perceived negative consequences of flexible working in the UK. Social Indicators Research
- Duvander, A., & Johansson, M. (2012), "What are the effects of reforms promoting father's parental leave use?"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, 22(3), 319-330
- Fuller, S., & Hirsh, C.E. (2018), "Family-Friendly" Jobs and Motherhood Pay Penalties: The Impact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Across the Educational Spectrum, Work and Occupations, 46(1), 3-44
- 스웨덴 사회보험청 <http://forsakringskassan.se>
- 스톡홀름 시 어린이집 관련 정보 <http://forskola.stockholm>

감사합니다

| 발제 2 |

충남 인구정책 대안모색을 위한 북유럽 출산·양육정책의 특징과 시사점

이 관 룰 선임연구위원(충남연구원)

충남연구원 제3차 지역정책세미나 (2024.9.27)

충남 인구정책 대안모색을 위한 북유럽 출산·양육정책의 특징과 시사점

인구감소대응전략팀
(이관률·김용현·박경철·송민정)



목차

- I. 왜 북유럽을 주목하는가?
- II. 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출산율 변화는?
- III. 북유럽 출산·양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?
- IV. 충남 출산·양육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?
- V. 향후 과제는?

I

왜 북유럽을 주목하는가?

I 왜 북유럽을 주목하는가?

인구감소문제는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 필요

- ✓ 저출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출생률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전체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

* 북유럽 국가는 서유럽 혹은 미국과는 달리 식민지배의 역사가 거의 없으며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

북유럽 국가는 다른 서구 국가와 차별되는 인구정책 추진

- ✓ 북유럽은 다른 서구 국가와 달리 이민정책보다는 출산과 보육 중심의 인구정책으로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음

* 북유럽은 세계최고의 행복국가 (행복도에서 핀란드는 세계 1위, 스웨덴은 6위, 노르웨이는 7위)로 평가되고 있고, 성평등 (노르웨이는 세계 2위, 핀란드는 3위, 스웨덴은 5위)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

- 우리나라는 행복도가 전 세계 57위, 성평등은 105위 수준

- 「2015년 어머니보고서(State of the World Mothers(2015)」에서 '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'에 노르웨이는 1위, 핀란드는 2위, 스웨덴이 5위를 차지한 반면, 우리나라는 30위 차지

I 왜 북유럽을 주목하는가?

북유럽 국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

- ✓ 북유럽 국가의 인구정책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고,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

- *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 유럽의 인구정책에서 출산율 제고를 정책목표로 제시하지 않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음
- * 북유럽 국가는 비교적 높은 출산율(스웨덴 1.52, 노르웨이 1.50, 핀란드 1.32)을 유지하고 있고,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출산지원 및 양육(ECEC :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)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출산제도를 가지고 있음

북유럽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한 모범사례

- ✓ 스웨덴, 노르웨이,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구조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념적 측면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을 완전히 통합한 모범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음(서동주, 2015)

- * OECD의 많은 회원국들이 북유럽 국가의 통합사례를 모델로 삼아 유보통합을 추진해가고 있음. 이처럼 북유럽 국가는 복지국가모델에 기반을 둔 출산·양육정책으로 지난 20년간 평균 합계출산율 1.5를 상회(핀란드만 최근 다소 낮음)했으며, 향후 합계 출산율 1.8회복을 목표로 출산·양육정책을 강화하고 있음

I 왜 북유럽을 주목하는가?

북유럽은 지역균형정책을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

- ✓ 북유럽, 특히 핀란드가 2021년 발표한 인구정책에서는 지역불균형이 출산율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균형정책을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다루고 있음

- * 북유럽 인구정책은 출산율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, 그리고 지역불균형을 출산율 저하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지역균형정책을 인구정책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이 다른 국가와 매우 차별적인 특징임

본 발표의 목적 : 북유럽 출산·양육 정책을 검토하여 충남이 추진해야 하는 정책대안 발굴

- ✓ 본 발표에서는 북유럽 출산·양육정책의 검토대상 국가를 스웨덴, 노르웨이, 핀란드로 한정
- ✓ 북유럽 출산·양육정책은 출산지원, 아동·양육수당, 부모휴직·휴가, 보육서비스, 일·가정양립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비교·분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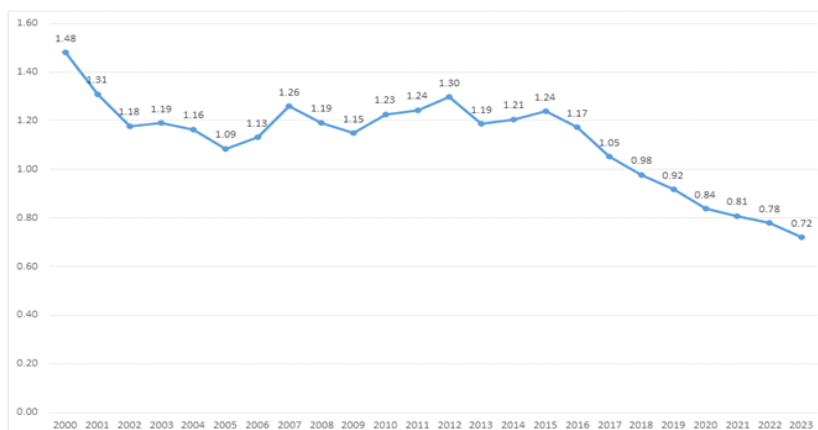
II

우리나라와 북유럽 출산율의 변화는?

II 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출산율 변화는?

우리나라 출산율 변화 :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는 저출산에 있고, 매우 심각한 수준

- ✓ 2000년(1.48명)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, 2023년 출산율(잠정)은 0.72명으로 떨어짐
- ✓ 2023년 출산율은 2000년에 비해 0.76명이 감소한 것이고, 연평균 2.23%가 감소하였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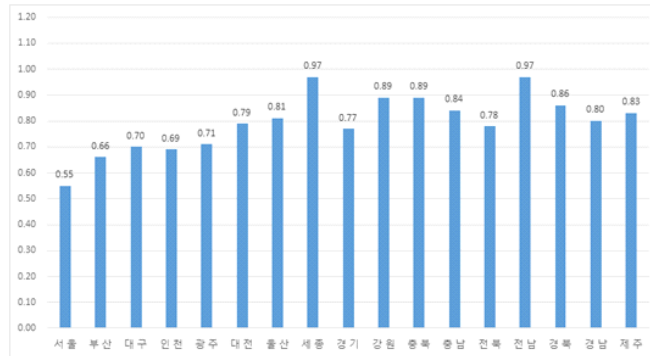
* 자료 : 통계청 (각 연도)

[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(2000~2023년)]

II 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출산율 변화는?

시도별 출산율 현황 :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출산율은 모두 1명 이하

- 2023년 기준으로 세종과 전남의 출산율이 0.79명으로 가장 높고, 서울과 부산이 각각 0.55명, 0.66명으로 가장 낮음
- 2020년에는 세종, 전남, 강원, 충남, 제주,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감소하였고, 2022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, 그리고 2023년에는 모든 지역 출산율이 1명 이하로 감소하였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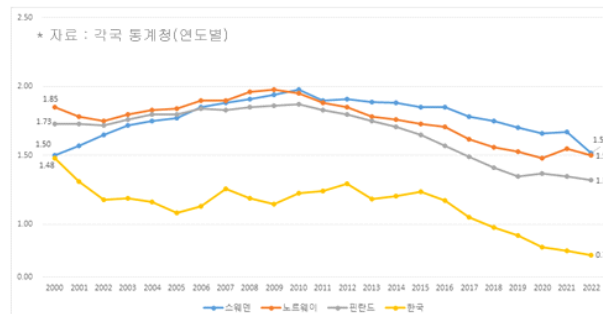
* 자료 : 통계청(2024),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산·사망통계 (잠정)

[2023년 시도별 출산율(잠정)]

II 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출산율 변화는?

북유럽 출산율 변화: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증가, 그 이후는 감소 추이

- 스웨덴 : 합계출산율 1.6명(2000년) → 1.9명(2010년) 증가
 - * 2020년에는 1.7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등 약 10년 기준으로 등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, 꾸준히 1.5명 이상
- 노르웨이 : 2000년 ~ 2022년까지 대략 1.5 ~ 2.0 사이 기록
 - * 2000년 1.85였던 출산율은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.98로 최대치 기록 (2020년 1.48 최하치 기록)
 - * 회복세를 보여 2021년에는 1.55, 2022년에는 1.5대를 보임
- 핀란드 : 2022년 1.32명
 - * 2000년의 출산율 1.73에 비해 0.76배 감소추세. 지난 20년 간 핀란드 출산율은 -31.06% 감소



[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출산율 변화 추이]

II 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출산율 변화는?

우리나라와 북유럽 출산율 변화의 비교

- ④ 북유럽의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지만, 여전히 1.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 - * 2000년을 기준으로 스웨덴의 출산율은 1.50명, 노르웨이는 1.85명, 핀란드는 1.73명이었고, 당시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1.48명
- ④ 북유럽 국가들은 2010년까지는 출산율이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출산율이 감소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
 - * 그 결과 2000년에는 북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.37명 적었으나, 2022년에는 0.74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
 - * 유럽 국가들은 이민자에 기반한 출산·양육정책이지만, 북유럽은 출산에 기반한 출산·양육정책이라는 차이가 있음
- ④ 북유럽 출산·양육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, 가족 및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추진하고 있음
 - * 북유럽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이고 완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해, 우리나라는 선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으로 추진되는 특성이 있음

III

북유럽 출산양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?

III 북유럽 출산양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?

출산지원부문

구 분	주요 특징	시사점
스웨덴	- 과거보다 초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 - 난임이라는 의사소견서 있으면 관련 비용 지원 가능 - 출산 2주 전 산모에게 휴가제도 있음	- 비혼여성에게도 혜택이 주어짐 - 우리나라보다 혜택의 범위가 넓음 - 난자 채취관련 3번 무료, 10개 배아가 나오면 10번 시술 지원 등
노르웨이	- 출산수당과 임신수당 지급 - 산모가 가장 안전한 나라(모성 사망률 0)	- 임신부가 위험한 일에 종사하다가 휴직 및 퇴직 시 수당을 지급
핀란드	- 가족계획을 통한 인식개선 - 난임치료 강조 - 출산보조금 - 영아양육용품 선물(49개 품목) - 출산휴가 105일 - 임신부 의료 서비스	- 비자발적 자녀없음에 대한 차별 제거 - 출산휴가의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- 모든 임신부에게 의료서비스 무료 제공

III 북유럽 출산양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?

아동·양육수당부문

구 분	주요 특징	시사점
스웨덴	- 16세 미만 자녀대상, 가구 대상 - 남성의 육아장려를 위해 양성평등 보너스제도 도입	- 임신수당 및 주거수당 등도 지원 - 스웨덴에서 아동·양육수당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함
노르웨이	- 보육시설의 획기적 확충 - 양육수당 수혜자는 점진적 감소 - 2017년부터 국가건강보험 5년이상 가입자 양육수당 혜택 - 아동수당에서 싱글맘의 경우 추가 지원	- 양육수당의 확대보다는 공적보육시설의 확충 필요 - 양육수당의 보험화를 통해 재정확보 마련 및 관리 체계화
핀란드	- 17세이하 자녀수당 - 개인보육수당 : 취학 전 까지 - 아동가정돌봄수당 : 3세 미만 - 부분양육수당 : 3세 미만 혹은 1~2학년	- 보편성, 동일한 적용 - 자녀수당의 경우 편부모에게 추가 금액 지급 (다자녀의 경우 보다 많은 금액 지급)

III 북유럽 출산양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?

부모휴직·휴가부문

구 분	주요 특징	시사점
스웨덴	- 대표적인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 - 남성도 가사와 육아에 동참하도록 설계 -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'아버지의 달'제도 도입	- 모성할당제외 부성할당제 도입으로 육아와 가사와 성평등 정신에 입각한 제도 마련 - 남성과 여성의 공동육아
노르웨이	- 출산 전 휴가(3주, 유급) - 출산휴가(15~19주, 유급) - 부부합산 49~59주 휴가(소득 100~80%보장) - 아버지휴가 의무화(16~18주, 소득 100~80%보장) - 부부장기휴가 사용률의 지속적 증가 - 12세미만 자녀 질병 유급휴가(1명당, 10일)	- 출산 전부터 휴가를 보장하여 안전한 출산 지원 - 부성할당제의 강제화를 통한 영유아 돌봄에서의 성평등 실현 - 2021년 기준 부부의 장기 유급휴가 사용 비율이 79%일 정도로 휴가의 실질적 효용성 보장 - 아이들의 질병에 대한 부모 휴가 보장
핀란드	- 유급양육휴가(부모 모두 가능) - 유급부친휴가(총 54일) - 자녀 생일 무급 휴가 : 3세 까지 - 임시보육휴가 (무급, 자녀가 아픈 경우)	- 양육휴가 : 유급출산휴가 종료시점부터 158일(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, 추가 출산 1명당 60일 추가 제공 - 부친휴가 : 부친에게 18일 추가 (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 - 보육휴가 : 10세 미만 최대 4일

제3차 지역정책세미나

15

III 북유럽 출산양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?

보육서비스부문

구 분	주요 특징	시사점
스웨덴	- 스웨덴 가족정책 중 두번째로 중요한 정책 - 종일제 유아·보육기관 존재(유보통합성격)	- 성평등에 기반한 유자녀 여성 고용률 제고에 일조 - 단순 보육이 아닌 영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초점 - 보육기관부터 스웨덴 아동은 성평등 정신 함양
노르웨이	- 보육시설에 대한 획기적 투자 - 교육 및 보육에 대한 통일적 관리 (아동가족부 → 교육연구부, 2006) - 영유아의 높은 유치원 참여율 (93.8%, 2023년 OECD평균 83.0%) - 보육서비스의 실행주체는 지자체 - 학교와 방과후 돌봄기관 연계 프로그램 강화	- 보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영유아시설의 통합 관리 필요 - 공립과 사립 형태를 유지하되 교육의 질과 보육 혜택은 동등하게 보장 -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권한 강화 - 6~8세의 방과후 돌봄기관 확대
핀란드	- 지방정부 보육서비스 제공 - 지방정부 ECEC - 비정부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-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 - 야간 및 주말 보육서비스	- 지방정부 보육서비스 : 유료 - 지방정부 ECEC : 무료 (일부 유료) - 다양한 서비스 제공 - 보육 서비스에 식사 포함 - 아픈 아이 돌보기 가능

제3차 지역정책세미나

16

III 북유럽 출산양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?

일·가정양립부문

구 분	주요 특징	시사점
스웨덴	- 근무시간 조정이 매우 간편함 - 시간제 일자리 발달	-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활성화 -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불안 형태가 아니라 기존 여성 배려 차원
노르웨이	-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권 확대 - 여성고용률이 81.0%(2021)일 정도로 높음 (OECD 평균 69.0%) -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적고, 노동시장 불안정지수가 가장 낮음(부양가족 고용 중 임시계약직은 9.3%)	-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권 보장으로 일·가정 양립실현 -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수당 지급 필요 - 남녀 임금격차 완화와 노동의 안정성 강화 필요
핀란드	- 유연근무 및 시간제 근무 - 원격근무 - 연금제도와 연계 - 재가돌봄수당 : 최대 3년 - 여성고용률 제고	- 다양한 근무 형태 - 표준(안) 마련 - 연금 적립액 상향 조정 - 여성 노동의 단축 - 성평등

IV

충남 출산·양육정책은
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?

IV 충남 출산·양육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?

기본방향의 전환

- ✓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수단의 일치화
 - *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일·가정 양립이 가능한 휴직·휴가제도 마련
- ✓ 남성위주의 사회구조 개선 및 성평등 구현
 - * 가정과 일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하고,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고용안정
- ✓ 선별적·보완적 출산·양육정책에서 보편적·자기완결적 출산·양육정책으로 전환
 - * 모든 사람이 출산·양육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고, 개인 부담의 최소화 확보
- ✓ 개인 선호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출산·양육정책의 설계 및 시행
 - * 수혜자 맞춤형으로 출산·양육정책이 재구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전환
- ✓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유기적 연계협력 구조 구축
 - * 출산지원과 아동·양육수당은 국가 주도하에서, 보육서비스는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

IV 충남 출산·양육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?

출산·양육정책의 부문별 대응방안

부 문	세부 내용
출산지원	- 난임 치료 지원 대폭 확대 - 임신부 무료 의료서비스 제도 정착 - 충남 영아양육용품 지원 재편 및 확대 - 고위험 직군 임신부의 휴직 및 퇴직수당 지급 - 출산휴가 및 급여제도 확대 - 출산휴가 중 국민연금 납부 지원
아동·양육수당	-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- 18세까지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- 취약계층 및 다자녀 아동수당 추가 지급 - 수요지향적 양육제도 운영
부모 휴직·휴가	- 여성 산후 유급휴가를 6개월 확대 - 충남 아با유급휴가 연간 200시간 저축제 도입 - 육아휴직 응원수당 도입 - 3세 이하 및 8세 취학아동 학부모 연간 200시간 저축제 도입 - 자녀돌봄 휴가제도 도입
보육서비스	- 시군별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- 긴급 돌봄체계 구축 - 영유아 창의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- 보육 및 돌봄 인력의 체계적 양성 - 가족어울림센터의 확대 도입
일·가정양립	- 임신부 직원 재택근무 확대 -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 - 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활성화 - 18세 이하 자녀 동반 시 무료 입장 확대 - 국민연금 지급요율의 상향 적용

IV 충남 출산·양육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?

출산지원부문의 대응방안 :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의 불평등 제거, 제도의 보편화 및 부가적 지원

- ④ 난임 치료 지원 대폭 확대
 - * 난임 진단 시 횟수에 제약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을 보장
 - * 국가적 차원에서 난임 치료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추진
- ④ 임신부 무료 의료서비스 제도 정착
 - * 임신 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무료화 확대
 - * 현행 차등화 된 지원 비용을 최대 400만원 까지 확대 필요
- ④ 충남 영아양육용품 지원 재편 및 확대
 - * 가칭 영아양육용품위원회 구성을 통해 1년 단위로 필요한 영아양육용품을 연초에 제공
 - * 영아양육용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는 해당 용품 구입을 위한 별도의 현금 지급
- ④ 고위험 직군 임신부의 휴직 및 퇴직수당 지급
 - * 고위험 직군(예: 방사선업무 근로자 등) 임신부가 휴직 및 퇴직 시 일정한 수당 지급
- ④ 출산휴가 및 급여제도 확대
 - *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출산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 의무화
 - * 소득이 없거나 출산으로 인해 소득 창출이 어려운 경우 출산급여 지급
- ④ 출산휴가 중 국민연금 납부 지원
 - * 출산휴가 중 본인이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, 재직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납부
 - *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 제도와 병행하여 추진 방안 모색

제3차 지역정책세미나

21

IV 충남 출산·양육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?

아동·출산지원부문의 대응방안 :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확대

- ④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
 - * 아이의 자가 돌봄 시 양육수당을 부모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이웃으로 대상 확대 지원
 - * 양육수당의 절대 금액 상향 조정
- ④ 18세까지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
 - * 현재 8세까지의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18세까지 지원
 - * 아동수당은 향후 10년 이내에 18세까지 지급
- ④ 취약계층 및 다자녀 아동수당 추가 지급
 - *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취약계층(예: 한부모, 장애인, 저소득층 등)에 추가 지원
 - * 다자녀인 경우는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- ④ 수요지향적 양육제도 운영
 - * 재택 양육자가 시설 양육을 활용할 시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 - * 탄력적 시간대를 사용하는 경우 시설 양육을 하지 않은 수당에 대한 추가 지급

제3차 지역정책세미나

22

IV 충남 출산·양육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?

부모휴직·휴가부문의 대응방안 : 아빠 유급휴가의 확대 및 부모 저축휴가제도 도입

- ✓ 여성 산후 유급휴가를 6개월로 확대
 - * 현행 3개월의 여성 산후 유급휴가를 6개월로 확대
- ✓ 충남 아빠유급휴가 연간 200시간 저축제 도입
 - * 스웨덴의 “아빠의 달” 제정처럼 남성들의 유급휴가 활성화 정책 시행
 - * 연간 200시간 범위 내에서 아빠유급휴가를 저축제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
- ✓ 육아휴직 응원수당 도입
 - * 휴직자 일손 확보 차원에서 육아휴직자의 일을 맡은 동료에게 별도의 보상제 도입
- ✓ 3세 이하 및 8세 취학아동 학부모 연간 200시간 저축제 도입
 - * 어린 유아나 취학 아동 학부모에게 탄력적 휴가제도 제공
- ✓ 자녀돌봄 휴가제도 도입
 - * 자녀의 생일, 돌봄 및 질병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자녀돌봄 휴가제도 도입
 - * 자녀돌봄 휴가제도는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하여 도입

IV 충남 출산·양육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?

보육서비스부문의 대응방안 : 다양한 돌봄체계 확대와 보육 및 돌봄인력 양성

- ✓ 시군별 24시간 돌봄체계 구축
 - * 시군별로 24시간 운영하는 돌봄체계 구축(기본 무료, 일부 유료 운영)
 - * 비정부 사회복지기관을 발굴하여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 및 운영
- ✓ 긴급 돌봄체계 구축
 - * 24시간 돌봄체계 내에 긴급 돌봄(임시, 아침, 야간, 주말돌봄 등)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확보
 - * 특히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
- ✓ 영유아 창의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
 - * 연령별 수요에 부합한 다양한 영유아 창의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
 - * 영유아 창의프로그램의 성과 분석 및 환류 체계 구축
- ✓ 보육 및 돌봄인력의 체계적 양성
 - *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 및 근로환경 개선
 - * 보육서비스 자격증별로 돌볼 수 있는 연령 및 아동 수 지정
- ✓ 가족어울림센터의 확대 운영
 - * 시군별로 가족어울림센터를 확대, 도입
 - * 가족어울림센터의 주중 운영시간 확대 및 주말·휴일 운영 프로그램 강화

Ⅳ 충남 출산·양육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?

일·가정양립부문의 대응방안 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, 가족 및 성평등의 인식 개선

- ④ 임산부 직원 재택근무 확대
 - *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이 아닌 재택근무 확대
 - * 직종의 특성을 고려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작성 및 보급
- ④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
 - * 10세 이하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맞춤형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 - * 다양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, 수요자가 조건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 보장
- ④ 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활성화
 - * 교육부 및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가족의 가치,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확대
 - * 가족의 가치 및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공모대회 및 캠페인 활성화
- ④ 18세 이하 자녀 동반 시 무료입장 확대
 - *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자녀 동반 시 무료 입장 범위 확대
 - * 임산부 및 8세 이하의 자녀 동반 시 패스트트랙 의무적 시행 확대
- ④ 국민연금 지급요율의 상향 적용
 - * 자녀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지급 요율을 본인 지급 요율보다 상향 적용
 - * 다자녀의 경우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
V

향후 과제는?

V 향후 과제는?

출산·양육정책의 향후과제

- ✓ 정책수혜자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의 발굴 및 시행
 - * 실질적인 정책수혜자(예컨대 MZ세대, 유아, 사회적 약자 등)의 가치관과 새로운 생활패턴에 부합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다양한 의견수렴
- ✓ 출산·양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공감 형성 및 수용성 제고
 - * 민간기업 참여 제고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
- ✓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
 - *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의 설계, 그리고 성과주의적 측면에서 정책모니터링 체계 및 환류 시스템 구축
- ✓ 출산·양육정책과 지역균형정책의 연계화 방안 마련
 - *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에 대한 보다 강화된 출산·양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감 형성 및 성장지역과 차별화 된 출산·양육정책 방안 마련
- ✓ 비혼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
 - *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안정적인 지원제도 마련

**출산·양육정책은 보편적 관점에서 제도화하고,
정책수혜자 관점에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시행해야 합니다!!**

